기획논문 현시기 통일문제를 민중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통일 향한 '변혁'의 몸부림

이글은 현시기 통일운동에서 좀더 민중적 입장에서 바라볼것을 주장하고있다. 특히 통일운동에 대한 접근이 단편적이거나 외형적이 아닌 종합적 본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면서 교류, 평화수립, 군비축소문제에서의 민중적 대처방안과 과제를 담고있어 이전까지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차원의 글을 넘어선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수있겠다. 〈편집자 註〉

북 주체형 사회주의 경제개혁위한 시간 마련돼야

남북관계의 변천과 대내외 정세 수용해야할 통일 강령

독점재벌 아·태분업구조내 북한 하층편제 목표 남

현재 남북한 관계에 드리워져 있는 분단문제는, 그자체가 상이한 양 체제의 적대적 대립을 민족 내부에서 특수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 체제의 발전을 통하여 민중들의 고통을 강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 드리워져 있는 분단문제의 극복방법에 있어서 체제문제와 그것을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면, 결국 일관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거나 지극히 절충적인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분단문제 또는 남북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엄격하게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어야한다. 그것은 여태까지의 통일문제 또는 남북한문제를 파악했던 부분적·일면적인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재 남북한 관계의 변화 및 통일 문제에 대한 파악은 본질과 현상, 원칙과 조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올바른 구분과 종합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변혁의 관점과, 현정세의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 남북한 관계및 통일문제를 올바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인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넓게 보아서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우경적 '개혁'노선과 자본주의 진영의 새로운 판도및 전략이 결합된 데에 있다. 이러한 사태들은 이른바 '맑스주의의 위기'—이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용례와 달리, 맑스주의 자체의 역사적 한계와 이완성을 자신의 틀안에서 극복·지양할 필요성을 의미한다—를 조장하면서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일시적 후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가 초래한 국제적 '보편성'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현상으로부터 남북한 관계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러한 국제적 요인의 영향은 북한의 주체주의적 사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경제적 위기의 가속화와 외적인 고립의 촉진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주체주의형의 사회주의경제를 '개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려고 대미대일, 그리고 대남관계에서 명분론적 태도보다는 현실적인 실체의 인정 및 양보·타협 및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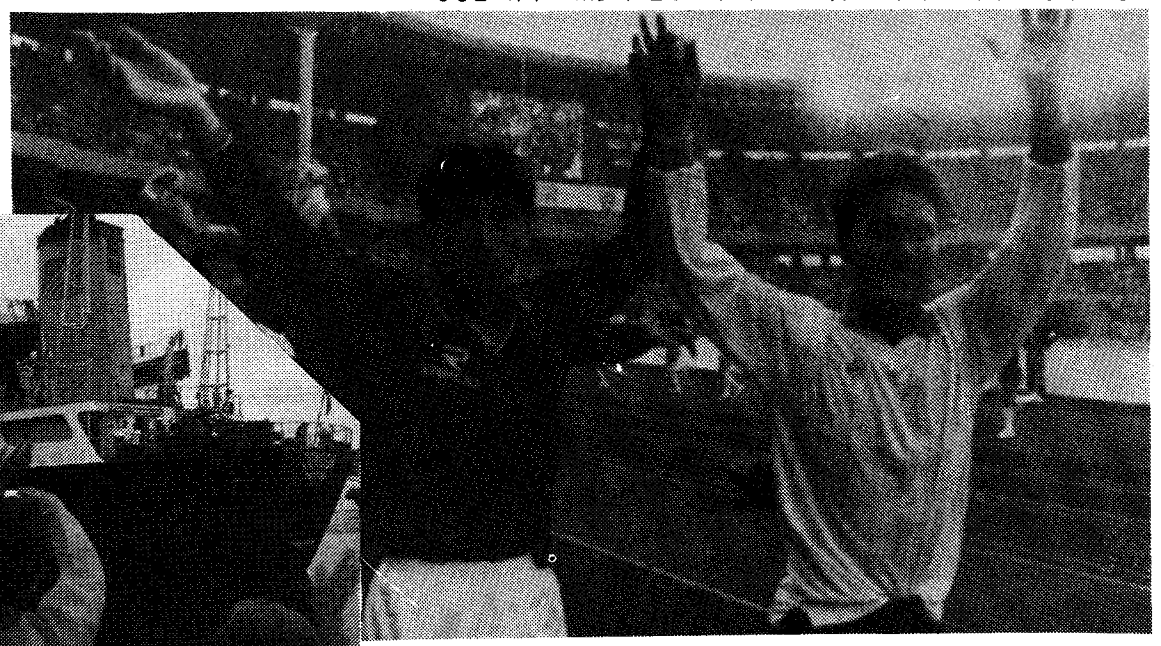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외독점자본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종속적 분업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활로를 새로이 모색하고 이러한 재편의 전제이자 결과로서 대내외적인 안정적 주도성을 확보하려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로인한 단기적 결실에 기초하여 북한을 아·태분업의 하층편제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흡수를 꿈꾸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북방정책의 지향인 것이다. 때문에 현단계에서 통일세력, 반통일세력이라는 일면적 구분방식은 오히려 명확한 대치선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통일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서 지적했던 체제의 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문제를 구별과 종합, 즉 통일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는 남북한 관계에서의 문제가 민족내적 문제이고 그에 따라 그것이 통일문제 그 자체로 이슈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대변혁의 특수성상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변혁의 객관적 완성과정과 통일의 최종적 실현간의 편차를 인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을 정치적 합작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체제적 단결·재형성이라고 규정하였을 때, 통일 그자체의 엄격한 전제로서 변혁의 완성과정이 위치지워진다는 사실을 승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과, 객관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통일문제는 구별되어야한다. 후자는 변혁의 진행과정에서도 남북한간계의 변전에 따라 무매개적로, 그러나 중간층의 관심을 압도적으로 사로잡으면서 객관적인 것으로 이슈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과련하여 앞서서 지적한 '통일의 전제로서 변혁'이라는 명제의 의미는 보다 중요해진다. 즉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는 통일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통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혁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처리방식또한 변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 바꾸어 말하자면 변혁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해석하고 배치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필요한 것이되 통일문제는 통일의 완성과 무매개적으로 직결시킴으로써 변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 또다른 운동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념적 발상을 유포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허구적 환상을 선전하는 것일 따름이다. '통일의 전제로서 변혁'이라는 명제는 통일문제를 무시하자는 논의가 아니다. 도리어 통일문제 그 자체가 놓여진 객관적 맥락을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그 위치를 규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자체를 부인하면서 변혁— 그들에 의하자면 이것은 통상 민주화로 폄하된다—과는 다른 '영역'으로 설정된 통일운동의 독자성을 운운한다면 기실 그것의 본질은 변혁의 관점을 부정하는 반변혁적, 궁극에 가서는 반통일적인 '순수감성주의'로 회귀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광범위한 대중적 관심과 더불어 쟁점화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통일문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배치되어나가야 할 것인가? 예컨대 그것은 전반적인 '통일요구', 긴장 및 전쟁상태의 종식과 진정한 평화의 수립문제, 남북한 양측의 군비축소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 중 일부는 최근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에도 몇가지 방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은 그야말로 국가간의 교섭을 위한 방안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방안'그 자체는 전형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잠정적으로 안정화하는 것, 또는 정도나 목표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해추구를 위한 일정한 전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들 '방안'은 국가간의 타협가능성을 중심으로 작성되며 한 국가체제내부의 문제해결을 지양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민중운동이 채택할 수 있는 요구강령은,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 파생하는 제반의 계기를 활용하여 그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책략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립선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그러면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 민중운동이 취할 수 있는 방침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북 관계에서 인적왕래, 교유,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 전반적인 교류요구로 표출되면서 맹목적, 감상적 통일론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전반적인 교류요구

이것은 남북한 관계에서 인적왕래, 교류, 남북한간의 민족적 동질성 확보에 이르는 요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것은 '통일문제'로 과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대중적 교류의 지향은 일반민주주의적인 요구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객관적인 근거와 무관한 통일환상과 결합되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통일환상은 주로 맹목적·감상적인 통일론이나 현조건하의 독점자본적 대북논리 모두에 의해서 더욱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합작론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전국농민협의회가 민중적 요구(남북한 간의 종자교류 등)로 구체화하여 제출한 바 있다. 즉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민중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 교류승인불가라는 것으로 이 '청원'은 가볍게 거부되었다. 반면 어떠한 경제교류만이 승인되었던가? 그것은 잘알다시피 남한독점자본가의 대표 정주영의 교류신청과 같은 것이었다. 사회주의권의 잠정적인 퇴조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자본운동의 일환을 적극 보호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경제협력·교류의 맥락은 독점자본주도의 성격(독점강화의 성격)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며, 민중적 경제요구를 배제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예컨대 현정권이 북한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해두고 있는 '경협자금'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것은 대북한용에 더해서, 소련에 30억불이라는 거금을 회사할 것이라고 발표된 바있다. 반면 '선진국'프랑스는 소련에 대해 10억불정도의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현정권은 걸맞지 않게 많은 돈을 북한 및 주변 사회주의나라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을 위해서이거나,그들 나라들의 경제적 난관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간의 생산력결합— 그것은 현대 생산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것이다—의 결과를 민중생활의 실제적 향상으로 귀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중적 경제교류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식화해야한다. 이 민중적 경제교류는 독점적 경제교류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하는 요구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요구'는 '경협'과 대조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획득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민중적 교류의 즉각적 실현가능성을 유포하는 환상 또한 경계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는 문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수립의 문제는, 해방 45년 이래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막대한 군비지출전가로 인한 민중생활의 곤란 증대를 합리화해온 것이 이 전쟁상태 때문인 것이다.

대외적 긴장고조의 상황에서 실리를 얻고자 하는 세력의 의도와 민중의 실생활의 위축상태를 명백히 대조해 보는 것으로부터 실재적인 평화의 상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협상문서상의 문제로 평화의 문제를 한정하고자하는 내외독점자본의 의도를 제한하고 공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비용의 민중복지증진에로의 즉각적 환원, 남북한의 평화협정의 체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그리고 이지대의 민중적 활용권 인정이라는 요구들이 남한내의 폭력상태의 해체를 지향하는 요구의 성격을 갖도록 할 때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적 관점에 입각하여 긴장 고조의 경제적 비용을 민중적으로 환원할 구체적 요구—이것은 현민주변혁단계의 개량을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민주변혁이 완수된 새로운 사회에서만 완벽히 실현될 수 있는 변혁적 경로 위의 요구이기도 하다—를 준비함과 아울러,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본질적인 장벽을 만들어내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폭로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비축소의 문제

한편 최근의 남북한 관계의 변화과정에서 군축문제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거론되고 넘어가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핵을 포함한 엄청난 남북한의 군사력상황은 남북 모두를 전쟁준비상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 형식적인 감축의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당장에라도 그것을 실현시켜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남 북한간에 조성된 최근의 상황은 실제적인 군비확대를 제어할 현실적인 방안을 갖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다. 북한의 수동적·타협적 군축안—그것은 대체로 병력이나 군사장비의 문제로 제한하고 미군문제도 핵무기나 병력·군사기지 등의 현존의 군사상태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그것도 남한측의 본질적인 요구인 '신뢰구축'개념, 즉 '시간적 유예'확보를 수용하고 있다 —은 결국 이러한 맥락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축운동이 실제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전형적 가이드라인을 이러한 '방안'이 제시해주고 있지 못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군축의 방안문제 또한 민중적 입장하에서 재검토되고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민중적 군축방안의 검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①남북한 간의 군사력면에 있어서 병력이나 군사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측에서 최근의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하고 있는 내용적 군비확장의 문제, 즉 새로운 군사기술의 채용이 야기하는 정치적·군사적 결과 및 경제적 비용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 ②외국군 주둔문제에 있어서 핵무기 즉각철수의 절실한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병력 및 기지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도 그 본질적 맥락을 놓치지 말 것, 즉 미군기지 주둔의 정치적·군사적 측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한 관계의 변천을 통해 쟁점화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남한내적인 변혁의 과제를 배재한 채 독자성을 갖는 자기완결적 강령으로 성립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통일요구강령은 변혁적인 이행강령 또는 약술적·정세적 요구투쟁강령과의 결합이 인정되어야한다. 이것은 현정세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의 변혁적·정치적 방향확보, 그리고 그것을 통한 민중의 기본적 정치전선의 강화라는 고유의 과제를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중간층에 대한 설득작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확보하고자하는 통일요구강령은 현정세속에서 이들 기본적 요구와 전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되는 보완적 요구—그렇다고 해서 이들 요구가 불편요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들은 아니다—의 위치를 점한다고 할 것이다.

하 성 열

〈자유기고가〉